

“소모적 업역 분쟁을 최소화하고, 산업 구조의 선진화 형성에 힘 합쳐야”

Interview



정 현 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 (주)정명건설 대표이사

지난 30여 년 동안 건설 경영인으로 살아오면서 (주)정명건설을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시킨 정현태 회장은 1년 전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지역 업체의 물량 확보와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1년이 흐른 6월 초, 정현태 회장은 여전히 “물량을 빼놓고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문제에 천착해 있다. 지역 건설산업에 드리운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경기마저 꺾이면 앞으로 부산 건설 업체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깜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현태 회장은 단단해 보이는 체격만큼이나 자신감이 엿보였다. 어렵기는 하지만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단합하여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부산을 국제도시로 변모시키는 재정비 아이디어를 짜내어 지역사회와 건설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업역 규제와 입찰제도, 지자체 조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키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작년부터 건설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주택경기를 빼놓고는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주택경기도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건설경기는 어떠하며, 아울러 부산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부산 지역의 관급공사 예정 물량은 7,984억원으로 지난해 물량의 3.5%에 해당하는 29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에 1조 1,417억원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14년에 5,302억원으로 급락한 이후 현재까지 회복 속도가 더더 물량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절반 이상이 1년 동안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의 종합건설업체 640개 사 가운데 347개 사가 단 한 건의 공공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활황세를 보여 온 부산의 주택경기도 지금은 제주와 함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악재로 인해 전국이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이어서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부산시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물량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내 발주기관들은 대형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타 지역 대형 업체의 부산 지역 내 공사 물량 독식을 막음으로써 다수의 지역 중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기획재정부 고시 금액 이상 공사에는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의 우선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타 지역 업체가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30%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지역 업체간 컨소시엄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 업체 참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책임 분야 가점을 상향 조절하거나 배점제로 개선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와 분리발주 법제화 등의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실천 노력입니다.

최근 들어 하도급대금직불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등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화되고, 분리발주나 소규모 복합공사 등 업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정부 정책 방향이 지역 업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정부는 2008년부터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간섭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는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100%로 지급이 담보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항이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고품질·융복합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규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창조경제에도 전면 배치되고 자재산업과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등은 시공 목적물의 품질과 이용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규제 개혁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여 업역간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주요 물량인 10억원 미만 공사의 상당 부분이 감소되고, 앞서 얘기한 각종 규제와 간섭 등으로 기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

역 중소 업체들은 우수한 젊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 중소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젊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업은 예로부터 3D 업종의 대표로서 모두가 꺼려하고 있고, 특히 젊은 인재들은 자금력이 열악한 지역 중소 업체보다 수도권의 대형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건설업 대부분의 업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 개선이 시급하므로 적정공사비 보장과 건설업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재무적 구조를 건실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청년인턴제에 있어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소 업체들도 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시장 등으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어 종합/전문 간에 유지관리업을 둘러싼 영역 분쟁도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 등록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 및 자본금을 갖추고 등록을 통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건축공사업의 등록 기준에 못 미치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공사업의 업역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공 목적물의 품질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공사업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 혁신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건설과 관련된 건설 자재, 장비 등 모든 업종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 수준으로 떨어져,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의 6~7% 수준과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건설업계 내부적으로 종합과 전문 건설업계 간 갈등을 빚으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업역 분쟁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쟁 환경 구축과 선진화된 건설산업 구조를 형성하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량 확보입니다. 따라서, 지역 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지방 공기업 등의 경우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방식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대형 공사는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도 사실상 입찰 참여가 가능한 구조인 만큼 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을 상향 또는 배점제로 하여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SOC 투자, SOC 민간투자 등 사회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업체의 재무적 혁신을 돕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건설업종 전부를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 대책 등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든 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용적률 규제, 민영주택 전매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END)

정리 : 이형우 편집장, 사진 : 인홍진 연구원